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06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주요내용

주 제 : 20대 정당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자 :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일 시 : 2015년 11월 19일 오전 7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요약 >

☞ 11월 19일 206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는 이정진 박사를 연사로 초청해 20대 정당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올해는 선거제도 개혁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존 선거제도나 공천 제도를 대폭 변화시키는 방식의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 의견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복입후보제, 완전국민경선제 등이었다.

■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현행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어서다. 첫 번째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당원이나 유권자 즉, 밑으로부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단수공천, 전략공천, 밀실공천, 낙하산공천 등 중앙당이나 지도부 중심이었다. 두 번째 공천방식과 룰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공천 방식과 룰이 지속성이 있어야하지만 선거 분위기와 선거 당시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공천방식과 룰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세 번째 비례대표 공천에 문제가 있다. 지역구 선거는 국민공천이나 여론조사, 당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의 개혁을 시도한 적 있지만, 비례대표는 개혁이나 공천방식의 변화가 시도된 적 없이 지도부나 중앙당에서 결정했다.

■ 정당의 공천 개혁의 일환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제시되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의 공정성과 개방성, 민주성이 확대될 수 있고, 정당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문제점도 있다. 공천은 정당이 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가 하는 것으로 정당의 책임성이 약화된다. 만약 다수의 유권자가 참여하지 않을시 조직선거나 동원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역선택의 문제점도 있다. 더불어 선관위 관리 하에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더 들어가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비용문제도 있다.

■ 공천의 개방성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당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원의 지지기반을 중요시 생각하던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도 최근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도록 공천방식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과 급진좌파당이 공동으로 국민경선을 실시했고, 결선투표에서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1위를 차지해 당선되었다.

■ 오픈프라이머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방식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나, 당규를 바꿔서 도입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후자, 즉 당규를 바꿔서 실시했다. 19대 국회에 올랐은 법률안들은 법을 바꿔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정당의 공천 방식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

■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의 경우 상향식 공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원, 대의원, 지지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지지자, 유권자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비경선의 경우도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심사결과까지 공개하고 이것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선거도 상향식 공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성, 소수자, 정치 신인에 대한 전략공천이 필요하며, 공천의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공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가능한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 밀실낙하산 등 중앙 지도부 중심의 현행 공천제도 투명성개방성 ↓ : 공천 방식과 룰을 계속 바꿔, 공천제도에 대한 불신 팽배

- 올해는 선거제도 개혁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현행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는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1을 넘어서면 안됐다. 인구편차가 3:1이라는 것은 표의 등가성이 1:3이고, 헌법재판소는 이 격차가 크다고 생각해 2:1로 축소하라고 했다. 결국 선거구를 재조정해야하는 상황으로 대도시는 선거구가 늘어나고, 농어촌지역은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 올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존 선거제도나 공천제도를 대폭 변화시키는 방식의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 의견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복입후보제, 완전국민경선제 등이 있었다. 권역별 비례제는 우선 전국을 5~6개의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에서 얻은 득표율로 그 정당이 얻게 될 최종의석수를 결정한 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는 것이다. 기존의 선거 방식은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는 정당에게 투표해서 각각 별개로 합산이 되었지만 이와 차이가 있다. 중복입후보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석패율제와 비슷하다.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동시에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지역주의 때문에 제시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 후보는 호남에서 당선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지역주의 완화 방안으로 중복 입후보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에서 어떤 후보자를 공천할건지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선관위에서 제시한 개정 의견을 위해 국회에서는 정

치개혁특별위원회와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현행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어서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당원이나 유권자 즉, 밑으로부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당공천은 투명성과 개방성이 부족했다. 단수공천, 전략공천, 밀실공천, 낙하산공천 등 중앙당이나 지도부 중심이었다. 두 번째로는 공천방식과 룰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당공천 과정에 유권자가 처음 참여한 총선은 2004년 17대 총선이다. 하지만 18대 총선에서는 다시 상향식이 없어졌고, 19대 총선에서 다시 일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공천 방식과 룰이 지속성이 있어야하지만 선거 분위기와 선거 당시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공천방식과 룰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세 번째로는 비례대표 공천에 문제가 있다. 지역구 선거는 국민공천이나 여론조사, 당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의 개혁을 시도한 적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개혁이나 공천방식의 변화가 시도된 적 없이 지도부나 중앙당에서 결정했다. 공천위원회가 있지만 정당 지도부에서 구성한다. 비례대표가 그동안 공정하게 또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천되거나 선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오픈프라이머리, 당원이 정당 기반 되지 못하는 현실의 반영

: 공천의 개방성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

- 정당의 공천 개혁의 일환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제시되었다. 오픈프라이머리란 공천 과정에 당원뿐만 아니라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동일한 날에 실시하자는 안과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 자율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다. 최근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한 외국 사례들이 많이 있다. 프랑스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법을 바꿔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 보다는 정당이 당원 당규를 통해서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기존 공천방식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의 기반은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회비를 내고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당원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당원이 적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당의 당원 비율이 적다. 당원이 정당의 기반이 되지 못한다면 정당은 유권자를 보고 당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 공천의 개방성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당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원의 지지기반을 중요시 생각하던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도 최근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도록 공천방식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당이 처음 발전했던 서구에서도 일반 당원을 모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 오픈프라이머리의 해외 사례로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과 급진좌파당이 공동

으로 국민경선을 실시한 바가 있다. 프랑스 사회당은 유럽의 좌파 정당 가운데 역사가 오래됐고, 당원의 역할도 중시하는 정당이다. 그럼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 이유는 역시 당원 문제 때문이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당과 급진좌파 정당을 중심으로 당원 배가운동을 실시하며 더 많은 당원을 가입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많이 없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려 했지만 정당에 관심이 없는 젊은 층이 많아서 당원을 늘리기가 어려웠다. 2012년에 더 이상 당원에 연연하지 말고, 일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천방식으로 바꾸었다. 참여 자격으로 좌파 현장에 동의한다는 서명과 1유로 이상의 경선 비용을 부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유권자 명부가 끝나면 폐기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결선투표 방식을 채택해 사회당에서 올랑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당선되었다.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가장 큰 쟁점은 ‘법 강제’ 여부

: 19대 국회 법률안들은 법 개정 실시 주장, 정당 자율성 침해 반대 의견도

-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의 공정성과 개방성, 민주성이 확대될 수 있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는 정당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시 원내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공천을 주는 게 당 지도부나 정당이 아닌 지역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 문제점도 있다. 공천은 정당이 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가 하는 것으로 정당의 책임성이 약화된다. 만약 다수의 유권자가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조직선거나 동원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상대방의 약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점도 있다. 비용 문제도 있다. 선관위 관리 하에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더 들어가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또한 발생한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면 가장 큰 쟁점은 법 강제 여부다. 오픈프라이머리 방식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있고, 당규를 바꿔서 도입 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후자, 즉 당규를 바꿔서 실시했다. 19대 국회에 올라온 법률안들은 법을 바꿔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정당의 공천 방식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연방 법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일부 주(states)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과 정당 자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자는 안(案) 중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나경원 의원의 안과 박영선 의원의 안이다. 나경원 의원의 안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하자는 안이다. 반면 2015년 4월 박영선 의원이 낸 법률안은 대선, 총선, 지자체장 선거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픈프라이머리는 탑 투 오픈 프라이머리(Top

Two Open Primary)로 정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후보자들 모두 경선에 출마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상관없이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3명, 새누리당 후보가 2명, 무소속 후보가 2명 나온다고 했을 때 이 경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사람을 결선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른 당 후보가 나오기 어려운 호남이나 영남지역에서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넓혀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 탐 투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했을 때는 본선에 두 사람만 올라가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있다.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대표발의	내용
6	2012.5.30	김응태 의원	대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 실시
1238	2012.8.21	최민희 의원	대선 및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시 완전국민경선제 실시
2297	2012.10.26	박영선 의원	총선에서 국민공천 예비선거제 실시 탐-투 프라이머리
8987	2014.1.3	김태원 의원	모든 공직선거에 완전국민경선제 실시
9122	2014.1.21	최재성 의원	대선과 광역단체장선거에 완전국민경선제 실시
14571	2015.4.2	이학영 의원	모든 공직선거에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 완전국민경선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만 참여
14738	2015.4.15	박영선 의원	대선, 총선, 지자체장선거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 실시 예비선거 결과 다수득표한 2인이 본 선거에 진출(결선투표제)
14772	2015.4.17	나경원 의원	총선에서 완전국민경선 실시

■ 지역구-비례대표 모두 상향식 공천 확대로 공정성 확보 필요 : 공천과정 투명, 공정, 객관적으로 해야

- 20대 총선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으로 지역구선거, 비례대표선거, 전략공천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향식 공천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은 오픈프라이머리와 다르다. 예를 들어, 독일의 연방선거법은 모든 정당이 당 내에서 당원 또는 대의원의 비밀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투표방식은 당이 자율로 정한다. 경선방식은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밀로부터 상향식으로 뽑혀야 한다는 방식은 법으로 정할 수 있다. 법제화는 어렵더라도 당원, 대의원, 지지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온라인 지지자, 유권자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공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 경우 경선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정성이 확보 될 것이다. 비경선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구가 새로 생기는 경우에 비경선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심사결과까지 공개하고 이것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비례대표선거도 상향식 공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당원이나 대의원 투표 방식을 추가하거나 공천배심위원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당 명부식이다.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는 가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만 투표했다. 하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방형 명부는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1번부터 50번까지 놓고 그 중에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논의해볼만한 하다.
- 여성, 소수자, 정치 신인 같은 경우 전략공천이 아니면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7명의 새누리당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됐다. 모두 새누리당에서 전략공천 방식으로 공천을 했다.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자를 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 영국 노동당의 경우 당원투표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지만, 당원 당규 상에 여성은 전략공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 소수자, 정치 신인에게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공천의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공천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여론조사의 역할은 늘어날 것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관위에서 안심번호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안심번호를 통해서 정당 공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법률안이 통과된 바가 있다.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어렵다고 생각되었을 때, 여야 당 대표가 안심번호 정당공천제 실시를 합의한 바 있다. 안심번호제란 지역의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1회용 쓸 수 있는 번호로 전환해서, 개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되 지역의 유권자를 성별, 연령별로 충분히 모집할 수 있는 방식이다.
-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공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가능한 밀로부터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206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보안법을 포함 민형법 범법행위자, 병역 등 4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어떤지?

답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자질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과 더불어 공무담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라는 것은 과거에 범법행위를 했더라도, 일정기간 본인이 그 범법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참회하고, 거기에 대해 벌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공무담임권을 가지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 부분까지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단지 그러한 경력이나 이력,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전력은 반드시 투명하게 제대로 공개해야한다. 알 권리는 충족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면 된다.

질문2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정치 문제를 포함 사회 문제에 대해 지식인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의견을 부탁한다.

답변 기존 투표율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20대의 투표율은 20% 정도로 가장 낮다.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기도 하고, 취업이나 다른 문제 때문이다. 실제로 20대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의 의견이나 자신들의 권익을 대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20대, 30대 연령의 젊은 정치인이 너무 없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대 의원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20대는 고사하고, 40대가 젊은 의원이라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규를 보면, 만 45세 이하가 청년 당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층의 권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청년층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나온 법률안 중에 비례대표에 청년 몫을 주자는 안도 나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54명으로 너무 규모가 적다. 거기서 청년을 여성처럼 10~20%는 반드시 청년으로 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청년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선거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도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제도개혁국민자문위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만 19세인데 OECD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거연령이 가장 높다. 최근에 일본도 18세로 낮췄다. 우리도 18세로 낮출 필요가 있지만 18세로 낮추면 고등학생이 가서 투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들 다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어른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정치에 관심이 아주 없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도 어렸을 때부터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이나 미국, 독일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교육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젊은 층도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질문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지식인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정치인들이 성명 발표 같은 것을 하는데 이번 총선에는 기존의 어느 총선보다도 정치인들의 입장 발표가 없었다. 여성단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일단 선거구 획정문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관심이 없다. 또 현 정부 들어, 특히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가 여러 이슈가 많다 보니 정치와 관련해서 지식인들의 입장 표명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질문3 우리나라는 정치육성 교육기관이 없다. 정당에서 젊은 층을 상대로 공개적인 정치 교육을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답변 우리 정당이 가장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정치 교육이다. 정당의 기능과 역할 중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 또 정책을 제시하는 기능 못지않게 일반 유권자나 당원을 교육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오

프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더라도 정당에서 미리 그런 기능을 해왔다면, 이미 유권자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본다. 미국의 경우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정치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정치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에서 하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정당이 나누어서 하게 된다면 청년당원을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질문4 여야가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지만 공천제도나 제도화를 보면 거의 유사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방식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 이념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정치적인 측면, 대북문제,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두 정당의 뿌리를 보게 되면 둘 다 보수정당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이념적으로 진보쪽은 정의당이나 지금은 없어진 통합진보당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봐도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념적으로도 차이이고 서로 다른 여야 정당인데 공천방식이나 정책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정당이 점점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공천을 하다보니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다 끌어안는 것이다.

질문5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두 개의 당이 약 1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당명(黨名)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우리나라 정당들 가운데 당명을 가장 오래 사용한 것이 한나라당으로 15년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당명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거의 1~2년에 한 번씩 바뀌다시피 했다. 진보정당 쪽도 너무 많이 당명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많았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거 때마다 실제로는 정치세력들 간에 당을 만들고 규합했다. 기존의 우리나라 정당들을 보면 정당이 어떤 국민적 기반, 이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보다는 중요한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진 케이스가 많다. 그러다보니 지도자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면 또 정당이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래되었던 것도 있다.

미국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미국이 의외로 보수적인 측면이 많다. 미국은 헌법 개정이 없다. 제헌헌법이 있고, 헌법에 더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보충해서 넣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도 계속 바뀌고 있다. 개헌만 10여 차례 있었고, 최근에도 개헌 논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정당의 기반이 미국과 우리가 다르다.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둘 다 당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나는 공화당 지지자다’라는 일종의 로열티가 있고, 대를 잇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정당지지 자체도 별로 높지 않고,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게 그나마 87년 이후에 지역주의로 인해서 영남에서 새누리당 지지나,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가 제일 오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역적인 지지 외에 정당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주요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적 차별성을 통해서 그 정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